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II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6
1. 종합청렴도	6
2. 외부청렴도	9
3. 내부청렴도	14
4. 정책고객평가	19
5.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22
III. 향후 추진계획	27
IV. 이슈별 분석	28

- [붙임] 1.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2. 올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3.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4.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I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기관 : 총 612개 기관

< '18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계
I유형	II유형	광역시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I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V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23	21	17	226	17	73	21	37	37	45	23	24	48	612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기관규모(정원) 등에 따라 분류¹⁾

※ 공직유관단체 중 2개 기관(문경관광진흥공단, 제인스)은 내부청렴도만 산출 가능하여 종합청렴도 미산정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 한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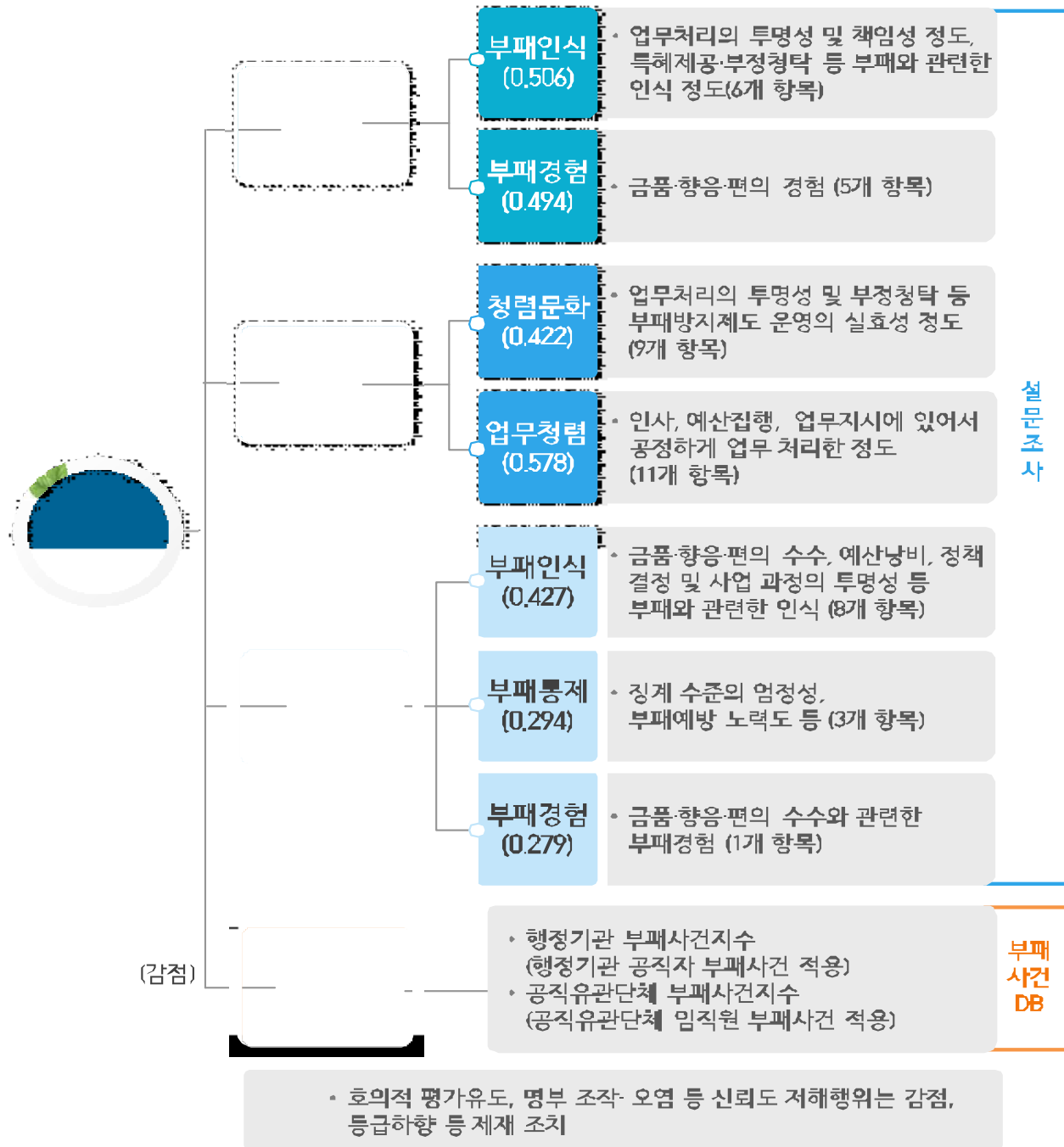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1) 중앙행정기관 : I 유형(2,000명 이상), II 유형(2,000명 미만)

공직유관단체 : I 유형(3,000명 이상), II 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III 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IV 유형(200명 이상 400명 미만), V 유형(200명 미만)

※ 정원을 우선 고려하되, 동일 업무 수행기관은 동일 유형 분류

<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4.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236,767명)

측정 영역	규 모(명)	조사 대상
외부청렴도	152,265	'17. 7. 1. ~ '18.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63,731	'18.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
정책고객평가	20,771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학부모 ²⁾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18.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 95%, ± 0.04 점, (내부) 95%, ± 0.03 점
(정책고객) 95%, ± 0.05 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행정기관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징계 등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의 경우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2) 지역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

5.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의 합리화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 발생 공직유관단체*를 측정대상에 추가

* 채용비리 점검결과('18.1월) 수사의뢰,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37개 기관 추가 측정

- (대상업무) 국민 안전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 기관 중점업무, '18년 신규측정기관의 부패취약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 발굴

※ 방사선안전규제, 국유재산 인·허가, 스포츠클럽 육성, 전문병원 지정·평가 업무 등

□ 측정 모형의 정교화

- 응답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 부패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 및 측정항목을 조정하고, 부패경험 문항 설문 개선

-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 관련 환경 변화 즉각 반영

-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도 정책고객평가의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채용과정의 부패수준 진단 강화

- '갑질 관행'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문에 반영하고, 상급기관의 갑질 관행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18년 시험 측정) 신설

□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개선

※ 그동안 기관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 지적

※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 제공

요 약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영역 점수 모두 상승

▶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17년(8.13점) 대비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77점, 부패경험 영역은 8.2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평균 0.7%로 전년(1.0%) 대비 감소

▶ 내부청렴도는 7.72점으로 '17년(7.66점) 대비 소폭 상승

-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 영역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이 큰 폭으로 상승
- 인사업무의 부패경험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률은 크게 감소

▶ 정책고객평가는 7.61점으로 '17년(7.29점) 대비 가장 큰 폭 상승

- 부패인식, 부패경험 및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사건 수는 증가

- 행정기관의 경우 총 145개 기관 546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54개 기관 78건에 대해 감점

※ '17년은 총 148개 행정기관 406건, 총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에 대해 감점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상승

-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0점) > 중앙행정기관(8.17점) > 교육청(7.94점) > 기초자치단체(7.88점) > 광역자치단체(7.64점) 순

- ▶ 중앙행정기관은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폭(0.47점)이 가장 크며, 광역자치단체(-0.01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Ⅱ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 청렴도

□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18점 상승

○ '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16년 이후 2년 연속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02년 ~'18년) >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모든 측정영역의 평균점수가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에 비해 정책고객평가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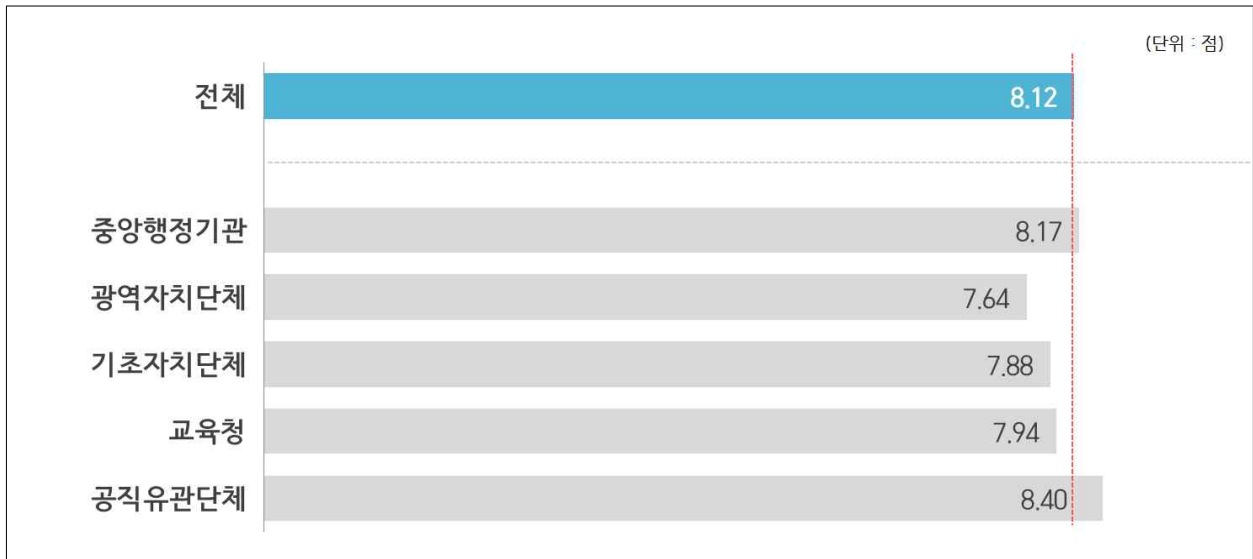
- 외부청렴도 8.35점, 내부청렴도 7.72점, 정책고객평가 7.61점으로 전년대비 각각 0.22점, 0.06점, 0.32점 상승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17년~'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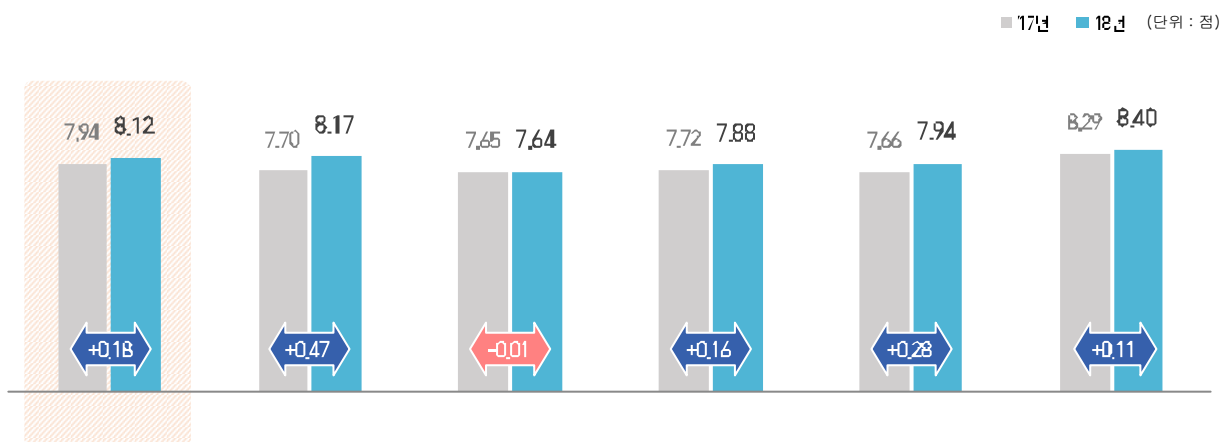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64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



-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중앙행정기관(+0.47점)의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
- 작년에 점수가 크게 상승했던 광역자치단체(-0.01)의 평균 점수는 소폭 하락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17년~'18년) >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³⁾ >

구 분		1 등급 기관	5 등급 기관
중앙 행정 기관	I 유형(23개)	통계청	국세청
	II유형(21개)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17개)		부산광역시	-
기초 자치 단체	시(75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영천시
	군(82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구(69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청(17개)		-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I 유형(2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II유형(37개)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
	III유형(37개)	한국감정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V유형(45개)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V 유형(23개)	-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구원(24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8개)	-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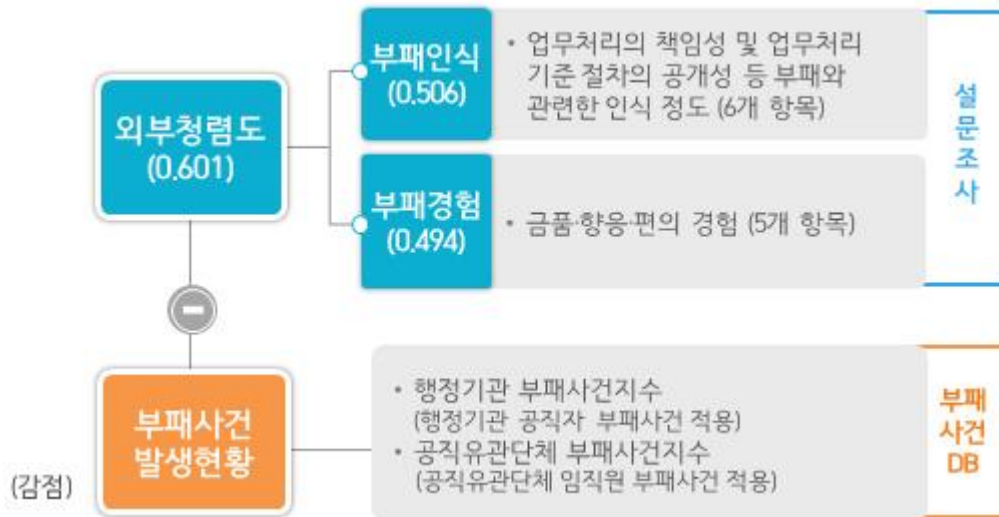
3) 1등급/5등급 : 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가나다 순 정렬)

기초자치단체 중 구,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중 II, V, 연구원,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유형은 1등급, 광역자치단체 유형은 5등급 해당기관이 없음

2.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총 11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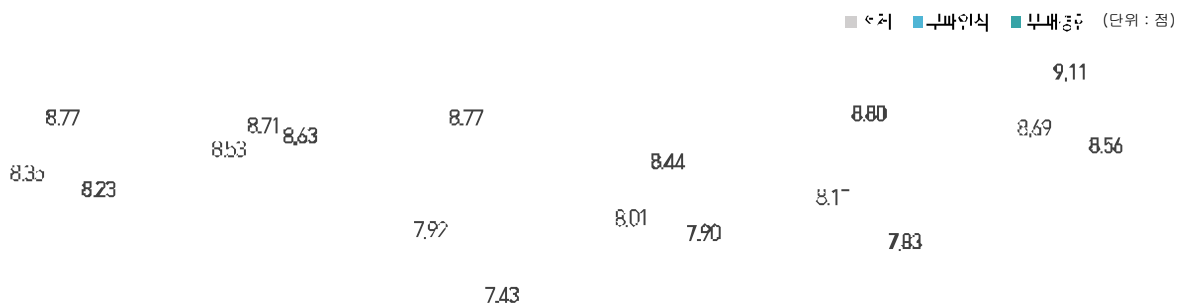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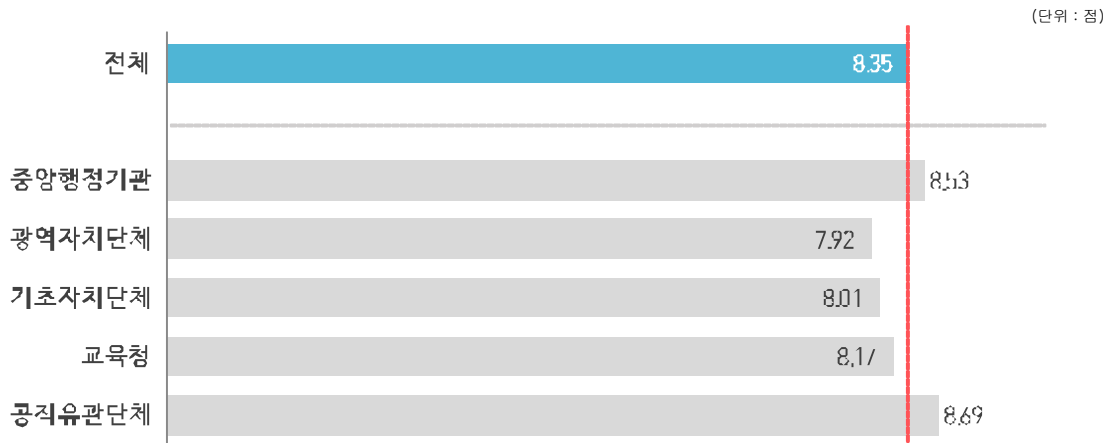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외부청렴도 점수		8.35	+0.22
부패인식 (0.50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0.167)	8.86	0.00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64)	8.60	+0.08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0.171)	8.94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91)	8.98	-0.05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4)	8.56	0.00
	업무처리의 책임성 (0.153)	8.63	+0.24
부패경험 (0.494)	금품 경험률 (0.118)	7.96	+0.51
	향응 경험률 (0.100)	7.89	+0.27
	편의 경험률 (0.093)	8.14	-0.12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8.04	-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8.66	-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전년(8.13점) 대비 0.22점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77점, 부패경험 영역은 8.2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69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92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18년) >



② 부패경험 항목 분석

□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개선

○ 그 동안 부패경험 설문은 본인이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험(경험, 빈도, 규모)과 주변사람의 제공 경험을 묻는 방식

- 그러나,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경험은 응답부담이 과도하여 과소 응답, 주변사람에 대한 간접 경험*은 과대 응답의 가능성 지적

* 주변 사람의 제공 경험만을 묻고, 구체적인 빈도·규모에 대해 묻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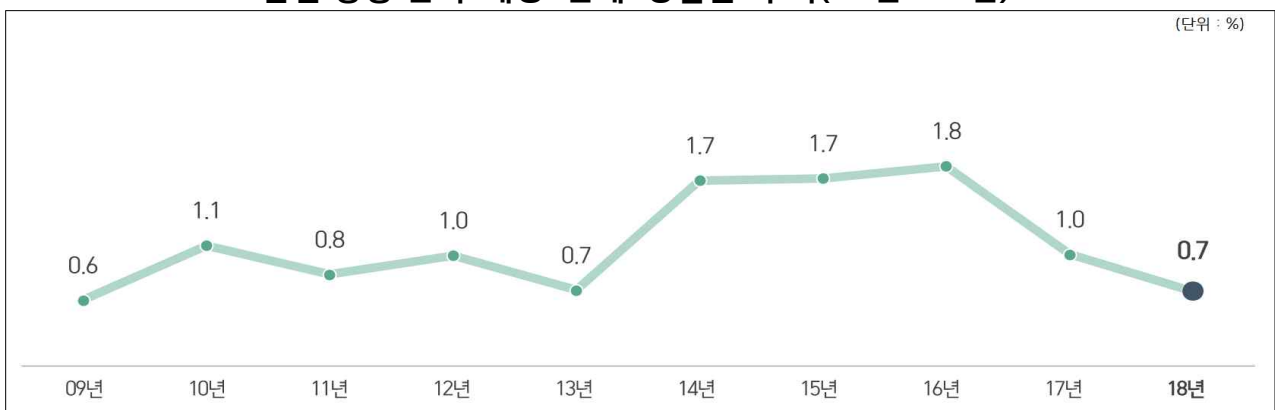
○ '18년 설문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통합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 외에 요구받은 경험을 함께 종합적으로 설문

※ 설문 문항 :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동료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과 구체적인 빈도, 규모

□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평균 0.7%로 '17년(1.0%) 직접 부패경험률 대비 감소

○ 설문 개선을 통해 부패경험에 대한 측정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로 부패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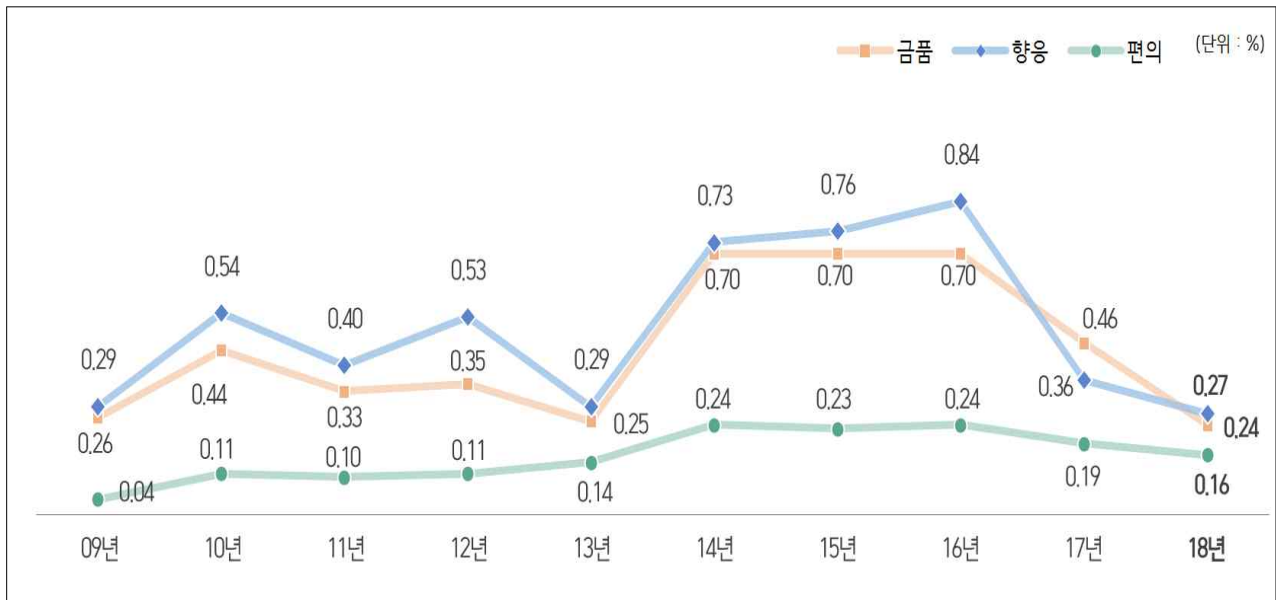
< 금품·향응·편의 제공 전체 경험률 추이('09년~'18년) >



※ '18년은 금품 경험률 0.24%, 향응 경험률 0.27%, 편의 제공률 0.16%의 합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특히 금품 경험률은 0.22%p(0.46% → 0.24%)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추이('09년~'18년) >



※ '17년까지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직접 경험률을 표기

- 모든 기관유형에서 부패경험률이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부패 경험률이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

	금 품 · 향 응 · 편 의 경 험 률 (%)										Gap ('18-'17)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 체	0.59	1.08	0.82	0.99	0.68	1.66	1.68	1.79	1.00	0.67	-0.33
중 앙 행 정 기 관	0.26	0.52	0.54	0.59	0.45	1.16	1.18	1.34	0.75	0.34	-0.41
광 역 자 치 단 체	0.29	1.25	0.94	2.13	1.70	3.44	4.36	4.06	1.54	1.13	-0.41
기 초 자 치 단 체	0.67	0.96	0.92	1.19	0.80	2.40	2.08	2.29	1.41	1.02	-0.39
교 육 청	1.22	2.39	1.63	1.60	1.29	2.40	2.58	2.27	1.51	0.82	-0.69
공 직 유 관 단 체	0.26	0.51	0.27	0.27	0.25	0.60	0.67	0.86	0.38	0.29	-0.09

□ 부패경험 평균 빈도는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 규모는 증가

- 평균 빈도와 규모도 동료의 경험 및 공직자 등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험을 포함하여 전년에 비해 측정 범위 확대
- 전체 부패경험 응답자는 1,020명, 빈도는 2,692회, 총 규모는 7억 7,029만원으로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601명, 1,576회, 4억 1,899.5만원)가 가장 높음
- 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는 2.64회, 평균 규모는 99.14만원

※ 금품 부패경험자의 평균 빈도는 2.4회, 향응은 2.9회, 편의는 2.7회('17년 2.2회, 3.3회, 3.0회)

※ 금품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121만원, 향응은 79만원('17년 107만원, 69만원)

<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빈도 및 규모('18년) >

	금품·향응·편의 경험 총 빈도(회)	금품·향응·편의 경험 총 규모(만원)	금품·향응·편의 경험자 수(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 ⁴⁾ (만원)
전체	2,692.0	77,029.0	1,020	0.02	0.51	2.64	99.14
중앙행정기관	117.0	2,526.0	56	0.01	0.15	2.09	60.14
광역자치단체	320.0	9,066.5	105	0.03	0.97	3.05	107.93
기초자치단체	1,576.0	41,899.5	601	0.03	0.71	2.62	91.88
교육청	302.5	8,367.5	98	0.03	0.70	3.09	111.57
공직유관단체	376.5	15,169.5	160	0.01	0.27	2.35	126.41

□ 부패경험 응답자 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중',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라는 답변이 가장 많음⁵⁾

-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중'(36.3%), '업무처리 전'(18.0%), '명절·행사 등 특별한 때'(15.8%) 순
-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36.8%),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29.5%),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19.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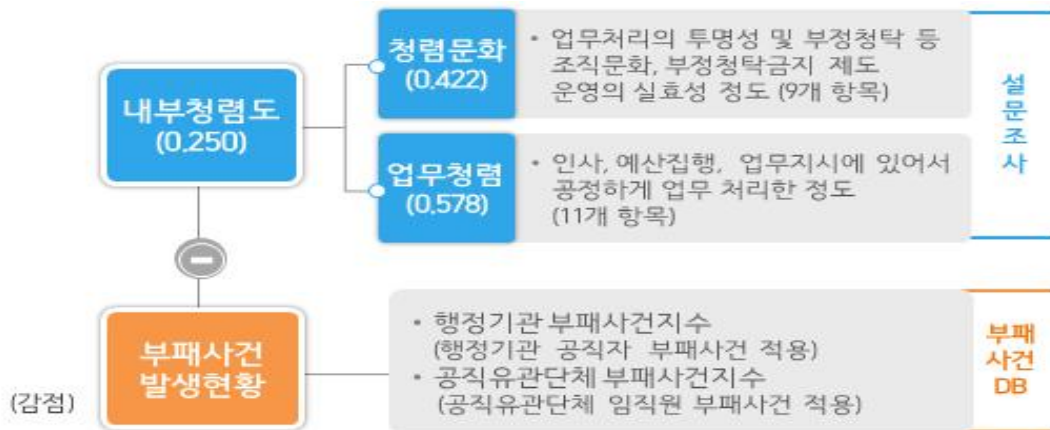
4) 경험자의 평균 규모(만원)에서 편의 경험자는 제외됨

5) 제공시기와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3.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총 2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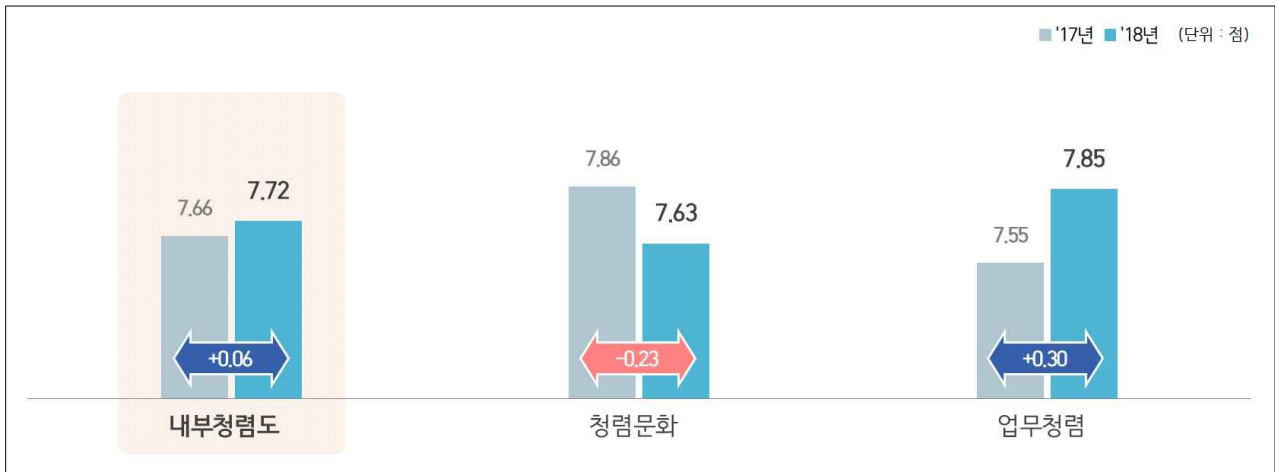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내부청렴도 점수				7.72	+0.06
청렴문화 (0.422)	조직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 (0.158)		8.03	-0.2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72)		8.28	-0.11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65)		7.06	-0.14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75)		7.99	-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48)		8.48	-0.19
		부패행위의 관행화 (0.182)		8.68	-0.11
	부패방지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22)		6.17	-0.31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81)		6.83	-0.28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297)		7.57	-0.27		
업무청렴 (0.578)	인사업무 (0.413)	경험 (0.719)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8.37	-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0.415)	8.62	-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0.389)	9.15	-
		인식 (0.281)	금품·향응·편의 특혜 제공 (1.000)	7.42	-0.23
	예산집행 (0.330)	경험 (0.662)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6.57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0.42)	7.12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0.371)	8.71	-
		인식 (0.338)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000)	8.06	-0.16
	업무지시 공정성 (0.257)	경험 (0.64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5.71	+0.36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7.01	+0.84
인식 (0.359)		부당한 업무지시 (1.000)	7.90	+0.32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소속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72점으로 '17년(7.66점) 대비 0.06점 상승

< 내부청렴도 점수 비교('17~'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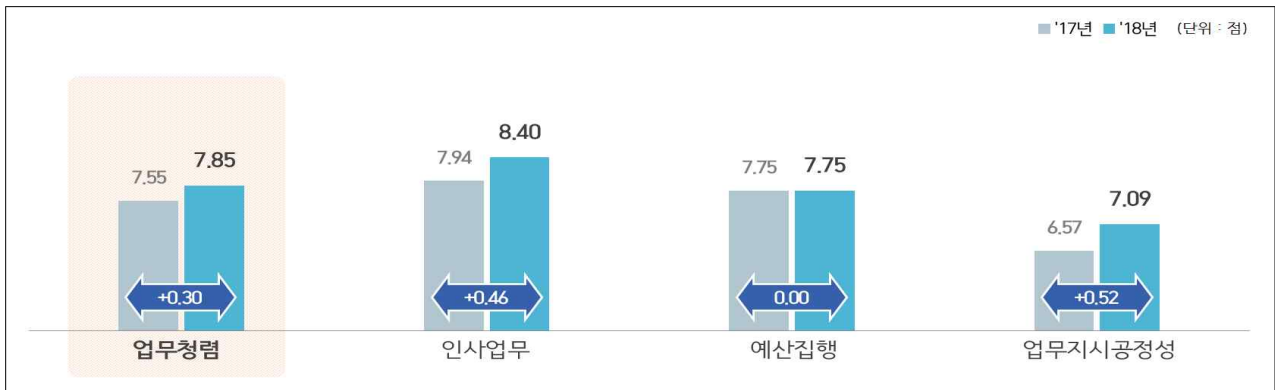
-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 영역 (7.63점)은 '17년(7.86점) 대비 0.23점 하락
- 업무처리의 투명성, 연고주의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청렴문화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7~'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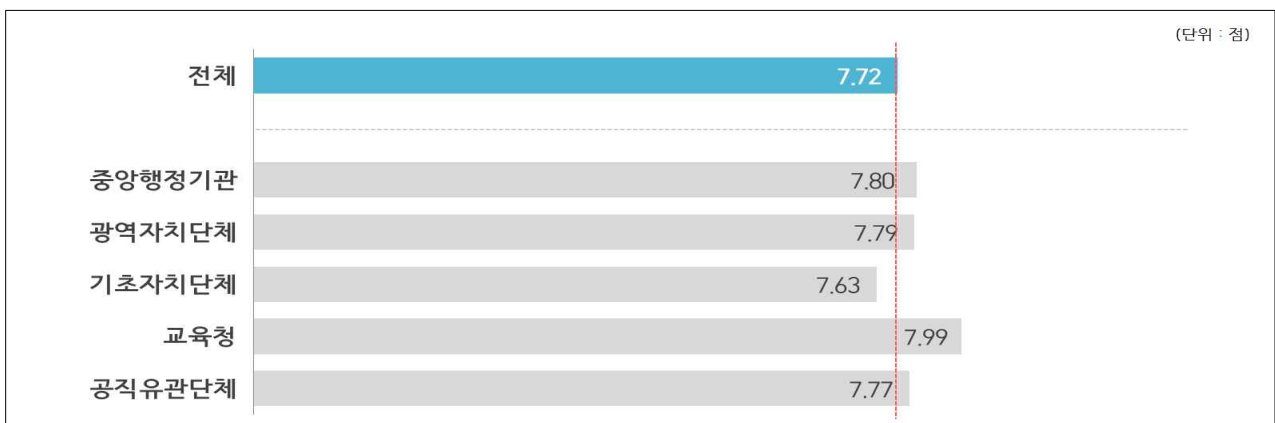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을 평가하는 업무청렴 영역 (7.85점)은 '17년(7.55점) 대비 0.30점 상승

< 업무청렴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7~'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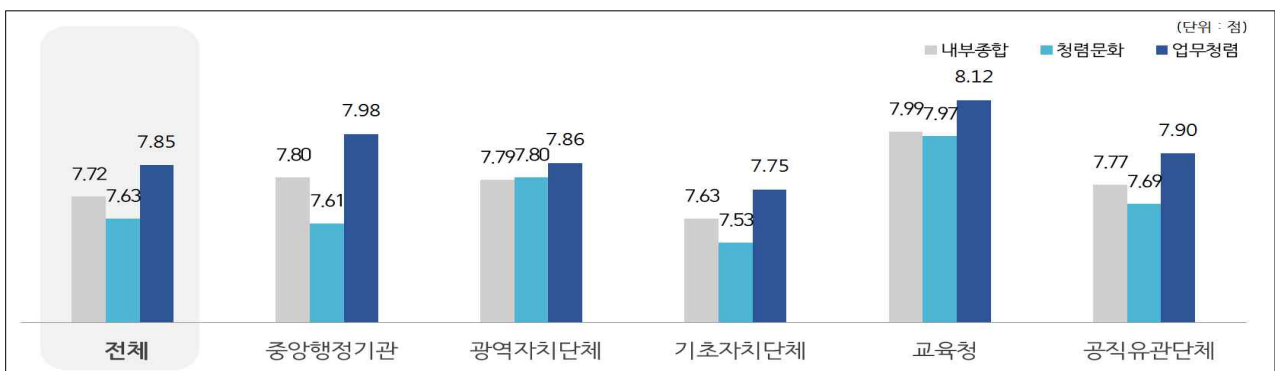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99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3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청렴도 점수 >



< 내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영역 점수비교('18년) >



② 부패경험 항목 분석

□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개선

○ 본인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을 묻던 인사업무의 부패경험 문항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

※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의 부패경험 문항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경험에 대해 설문

□ 업무청렴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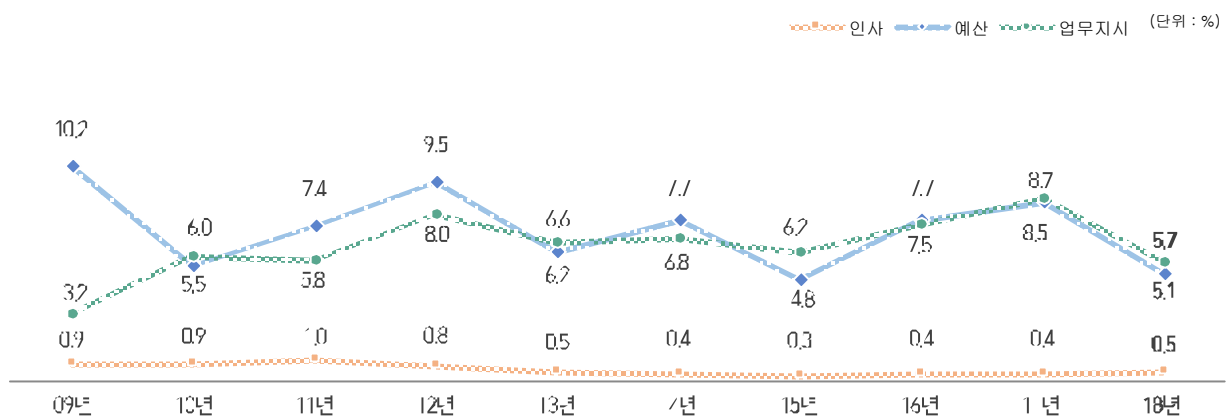
○ 인사업무에서의 금품, 향응 및 편의 경험률은 0.5%로 전년의 직접 부패경험률(0.4%) 대비 0.1%p 증가

- 부패경험 문항 측정범위 확대로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

○ 예산(업무추진비·운영비·여비·수당,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5.1%로, 전년(8.5%) 대비 큰 폭 감소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도 5.7%로 전년(8.7%) 대비 큰 폭 감소

< 내부청렴도 부패 경험률 추이('09~'18) >



□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인사 관련 부패경험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음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은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높음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부패경험률 >

기관유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예산집행 관련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중앙행정기관	0.2	4.6	5.9
광역자치단체	0.6	4.0	4.0
기초자치단체	0.7	5.3	6.2
교육청	0.4	3.0	4.9
공직유관단체	0.3	5.8	5.6
계	0.5	5.1	5.7

□ 부패경험 평균 빈도는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 규모는 증가

○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빈도는 2.0회, 예산집행 부패경험자는 9.0회,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자는 6.3회로 나타남

○ 인사 관련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49.9만원, 예산집행 부패경험자는 2,125.5만원으로 나타남

4. 정책고객평가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으로 구성(총 12개 항목)
-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정원 1,000명 이상 기관)에 한해 적용

< 2018년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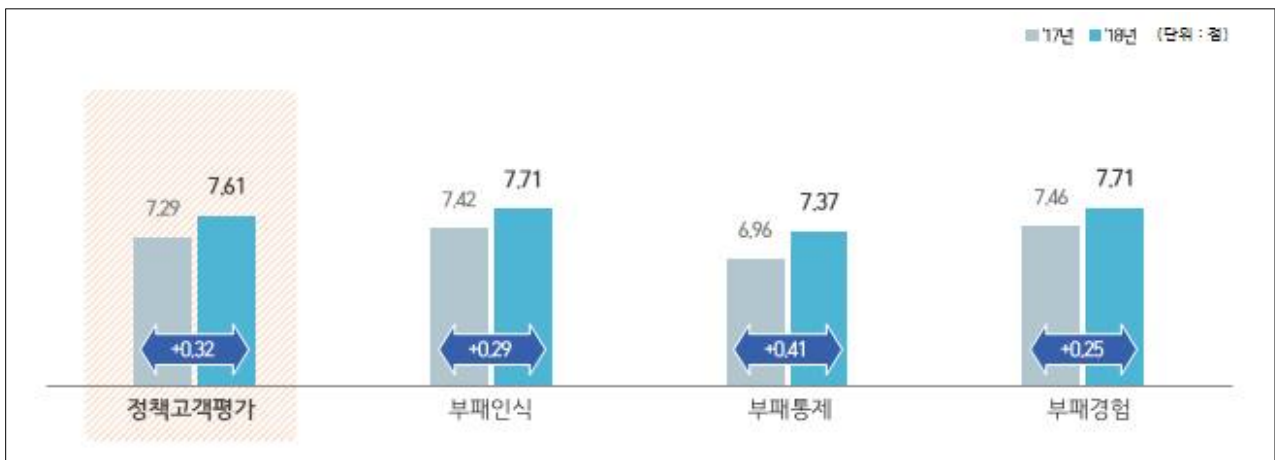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정책고객평가 점수		7.61	+0.32
부패인식 (0.427)	예산낭비 (0.126)	7.21	+0.15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52)	8.04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55)	8.23	+0.28
	특정인에 대한 특혜 (0.126)	7.85	+0.29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119)	7.26	+0.41
	정책 및 정보 공개 (0.104)	7.25	+0.24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09)	7.48	+0.55
	직무관련정보의 사적이용 및 제3자제공 (0.109)	8.10	+0.38
부패통제 (0.294)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74)	7.27	+0.43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06)	7.01	+0.50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0.320)	7.82	+0.27
부패경험 (0.279)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1.000)	7.71	+0.25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전문가·업무관계자(0.744) 점수와 주민 또는 학부모(0.256) 점수를 가중합산(광역자치단체는 주민, 교육청은 학부모 평가 적용)

① 전반적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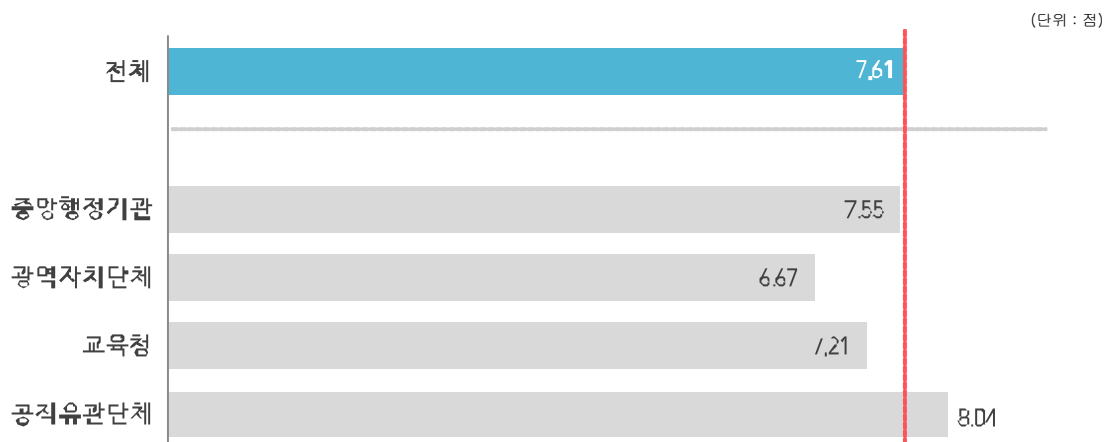
- 전문가·업무관계자6),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는 7.61점으로 전년(7.29점) 대비 상승
-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방지 제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통제, 금품·향응·편의 수수 간접경험을 반영한 부패경험 영역 모두 전년 대비 상승

< 정책고객평가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7년~'18년) >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04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6.67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정책고객평가 현황 >



-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모든 영역의 점수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 평가항목 점수 >

	정책고객평가	부패 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전체	7.61	7.71	7.37	7.71
중앙행정기관	7.55	7.51	7.15	8.05
광역자치단체	6.67	6.95	6.58	6.32
교육청	7.21	7.47	7.04	7.01
공직유관단체	8.04	8.16	7.86	8.06

② 부패경험 항목 분석

-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이 평가한 부패 간접경험률은 2.1%로 전년(2.8%) 대비 감소
- 기관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은 교육청(4.5%), 공직유관단체(2.2%), 광역자치단체(2.1%), 중앙행정기관(1.6%) 순
-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 응답은 지역 및 학부모(6.0%), 전문가(3.0%), 업무관계자(1.3%) 순

< 정책고객별 부패경험률 현황 >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전체	3.0	1.3	6.0
중앙행정기관	1.9	1.6	-
광역자치단체	5.0	1.1	6.9
교육청	3.2	0.6	5.0
공직유관단체	2.7	1.1	-

5.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

①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행정기관의 경우 공직자의 부패 관련 징계 등 처분통계와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의 사건지수를 종합⁷⁾하여 기관별 지수 도출
 - 공직자의 징계 등 처분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 정무직의 부패는 부패사건의 내용 및 관행화 등을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점수 산정
 -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145개 기관 546건, 480명으로, 전년(총 148개 기관 406건, 341명) 대비 건수와 인원수 증가
 -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47.4%)은 전년(49.0%) 대비 감소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3.8건, 평균 감점은 0.16점으로 평균 건수는 증가하고 감점 수준은 전년 대비 감소
- ※ '17년 감점 적용 기관 평균 사건 수는 2.7건, 평균 감점은 0.19점
- 감점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⁸⁾은 29억 3,091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021⁹⁾만원

7)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부패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8)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된 사건 474건 기준

9) 총 부패금액과 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 모두 전년(54억 514만원, 3,652만원) 대비 크게 감소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0.17점), 광역자치단체(0.15점), 교육청(0.12점) 순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70.6%로 가장 높고, 다음 교육청(64.7%), 기초자치단체(45.6%), 중앙행정기관(40.9%) 순
- 평균 사건 수는 교육청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광역자치단체(4.4건), 중앙행정기관(3.8건), 기초자치단체(2.9건) 순
- 감점대상 기관당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4,475만원), 기초자치단체(1,777만원), 광역자치단체(1,358만원), 교육청(1,040만원) 순

< 행정기관 유형별 부패사건지수 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A)	감점적용 기관(B)	전체발생 건수(C)	발생률 (B/A)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건수(C/B)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감점
전 체	306	145	546	47.4	3.8	0.16
중앙행정기관	44	18	69	40.9	3.8	0.17
광역자치단체	17	12	53	70.6	4.4	0.15
기초자치단체	228	104	306	45.6	2.9	0.17
교육청	17	11	118	64.7	10.7	0.12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618만원으로, 전년(1,189만원) 대비 큰 폭 감소
-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1,299만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1만원), 광역자치단체(339만원), 교육청(97만원) 순

< 감점대상 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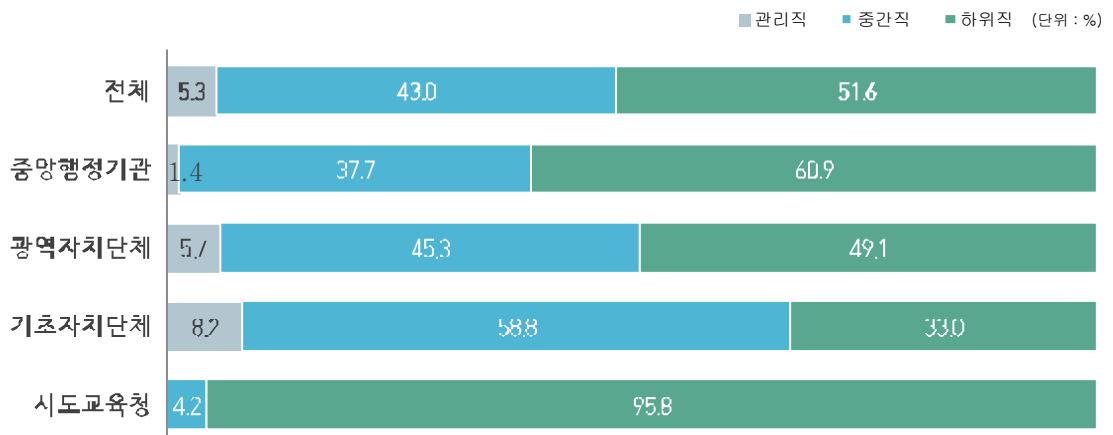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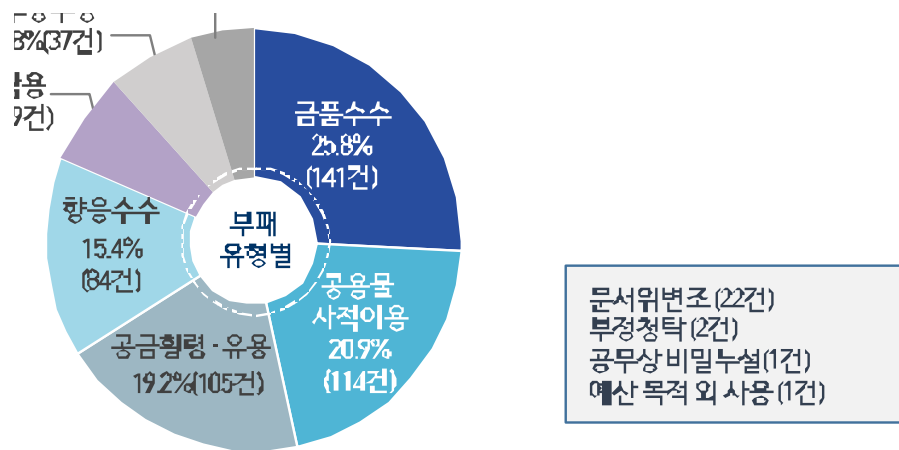
(금액: 만원)

기관유형	총 금액	감점대상 기관수	기관당 부패금액	행위자 수	1인당 부패금액
전 체	293,091	145	2,021	474	618
중앙행정기관	80,551	18	4,475	62	1,299
광역자치단체	16,295	12	1,358	48	339
기초자치단체	184,808	104	1,777	246	751
교육청	11,437	11	1,040	118	97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25.8%, 141건), 공용물 사적이용(20.9%, 114건), 공금횡령·유용(19.2%, 105건), 향응수수(15.4%, 84건), 직권남용(7.1%, 39건), 여비·수당 부당수령(6.8%, 37건) 순으로 나타남

< 부패유형별 현황 >



- 관리직(41.4%)과 중간직(30.2%)은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고, 하위직은 공용물 사적이용(39.0%)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위별 부패유형 >

(비율: %)

직위유형	합계 (%)	금품수수	공용물 사적이용	공금횡령·유용	향응수수	여비 등 부당수령	직권 남용	문서 위변조	기타
전 체	100.0	25.8	20.9	19.2	15.4	7.1	6.8	4.0	0.7
관리직	100.0	41.4	0.0	3.4	13.8	37.9	0.0	3.4	0.0
중간직	100.0	30.2	1.7	21.3	19.6	9.8	11.1	5.1	1.3
하위직	100.0	20.6	39.0	19.1	12.1	1.8	3.9	3.2	0.4

②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¹¹⁾에 의해 점수 산정¹²⁾
 - 부패사건 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등 처분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
-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54개 기관 78건, 384명으로 전년(총 54개 기관 82건, 169명) 대비 건수는 감소, 인원수는 증가
 -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23.0%)은 전년(27.3%) 대비 감소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1.4건, 감점은 0.4점, 연루자 수는 5.3명(전년 대비 평균 사건수는 감소, 감점과 연루자 수는 증가)
 - 감점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¹³⁾은 35억 8천만원이며, 사건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은 4천 6백만원

11) 반부패·행정·통계학 등 16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

12)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13)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을 수반한 사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공직유관단체 I 유형이 47.6%로 가장 높음

○ 감점 적용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공직유관단체 I 유형(0.45점), Ⅲ유형(0.44점), Ⅱ유형(0.43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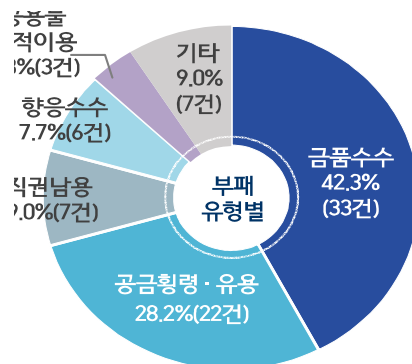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구분		전체	I 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V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235	21	37	37	45	23	24	48
	감점 발생 기관 수	54	10	7	5	13	4	3	12
	발생률(%)	23.0	<u>47.6</u>	18.9	13.5	28.9	17.4	12.5	25
감점 사건	전체 건수	78	22	9	6	17	6	3	15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4	2.2	1.3	1.2	1.3	1.5	1.0	1.3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9	0.22	0.08	0.06	0.12	0.07	0.05	0.08
	감점기관 평균 감점	0.40	<u>0.45</u>	0.43	0.44	0.41	0.4	0.37	0.31

< 부패행위 내용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2.3%, 33건), 공금횡령·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 7건) 순으로 나타남

< 부패유형별 현황 >



III 향후 추진계획

□ '18년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2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 강화('18.12월~'19.3월)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 홈페이지 공개 현황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19.1~3월)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19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 부패 현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제외기관과 신규 측정기관, 측정대상 업무 등 확정('19년 상반기)
-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측정모형 개선 검토
 - 응답자의 불이익 우려, 관대화 경향 등으로 인한 왜곡 응답 가능성이 지적된 내부청렴도의 반영비율 축소 등 방안 검토
 - 부패사건 감점 비율 조정, 반영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

IV 이슈별 분석

1. 우수·향상 기관 사례 분석

□ 최근 3년간 계속 1~2등급을 유지한 공공기관(56개)의 종합 청렴도 평균점수는 전체 측정기관(8.12점) 대비 0.41점 높음

- 특히,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부문(+0.51점)과 고위직의 솔선수범 항목(+0.49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 빈도 항목(+0.45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

※ 세부 기관명은 붙임 1 참조

□ 종합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8개 기관¹⁵⁾의 경우 전체 측정기관에 비해 내부청렴도의 기관장 노력도 항목(+0.47점)과 부패방지 제도 부문(+0.36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 부문(+0.55점)에서 큰 점수 차이

※ 1개 등급 이상 상승 세부 기관은 붙임 2 참조

※ 청렴도 우수·향상기관 사례는 붙임 3 참조

□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총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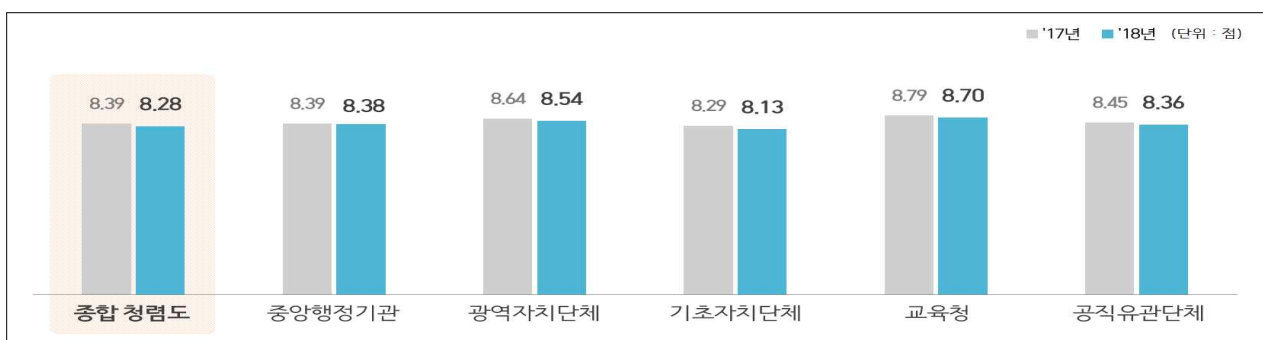
- 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부패사건 발생 감점이 없으며, 대부분 외부청렴도 상승 폭이 큰 편
- 부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율적 감사로 적발한 건은 감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체 상시 감사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에 기여

15)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부정청탁 관련 문항 분석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6년 이후로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속 상승하고, 부패경험률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
-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관련 문항을 분석한 결과,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 정책고객(8.23점), 내부 직원(8.28점), 외부 민원인(8.98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평가
 - ※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높은 것으로 인식
 - '17년에 비해 외부 민원인(-0.05점)과 내부 직원(-0.11점)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정책고객(+0.28점)은 낮아졌다고 응답
- 내부 직원의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는 경향
 - ※ 내부청렴도 부정청탁 인식 점수 : ('16) 8.49점 → ('17) 8.39점 → ('18) 8.28점
 - 내부청렴도 부정청탁 인식 항목은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점수 하락

< 내부청렴도 부정청탁 업무처리 인식('18년) >



- 작년에 비해 부패경험률 및 부정청탁 관련 경험률은 낮아짐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점수가 하락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부정청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반영

※ 내부 직원의 부정청탁 간접경험률 : ('17) 2.7% → ('18) 2.4%(-0.3%p)

3. 채용비리 관련 기관 분석

- 채용비리에 연루된 51개 공직유관단체¹⁶⁾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 '16년~'18년 3개년에 걸쳐 3년 내내 채용비리 연루 기관이 미발생 기관보다 인사업무 평균 점수가 낮음

〈 공직유관단체 및 채용비리 연루기관 현황('18년) 〉

분류	기관 수 (개)	2016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점수(점)	2017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점수(점)	2018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점수(점)
공직유관단체 전체	235	8.31	8.22	8.63
채용비리 연루기관	51	8.22	8.10	8.55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	184	8.36	8.25	8.66
차이(연루기관-미발생 기관)	-	-0.14	-0.15	-0.11

- 올해 내부청렴도 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41점), 업무 처리의 투명성(-0.36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0.36점) 항목에서도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에 비해 낮은 점수

4. 공공서비스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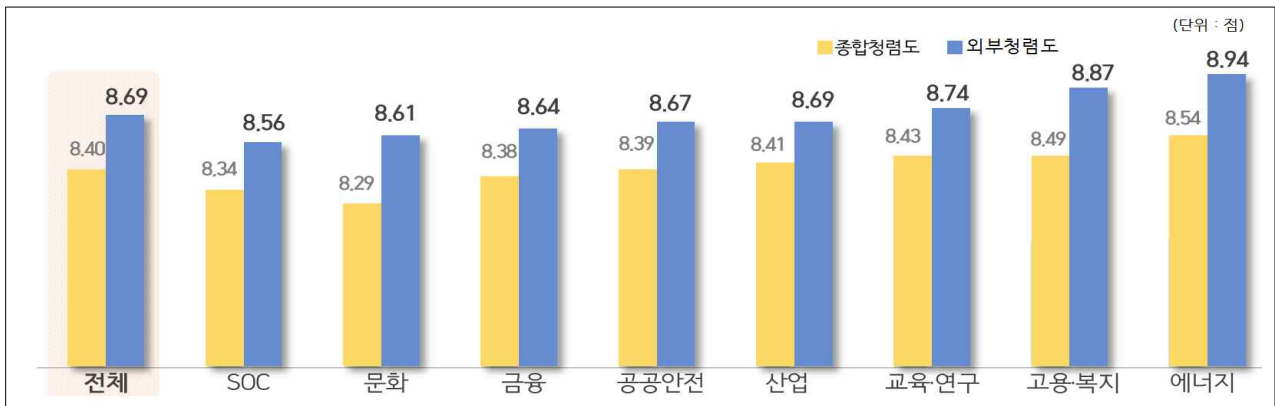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¹⁷⁾하여 분석한 결과,
 -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에너지 분야(8.54점) > 고용·복지(8.49점) > 교육·연구(8.43점) > 산업(8.41점) > 공공안전(8.39점) > 금융(8.38점) > SOC(8.34점) > 문화 분야(8.29점) 순

16)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 후속조치(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 수사의뢰, 징계요구 받은 기관, '18.1.29.) 해당 공직유관단체(수사결과 무혐의 기관은 제외)와 채용비리로 부패사건 감점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17) 233개 공직유관단체를 SOC(48개), 고용·복지(17개), 공공안전(28개), 교육·연구(47개), 금융(25개), 문화(관광·예술·언론)(20개), 산업(30개), 에너지(18개)로 분류

-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에너지 분야(8.94점) > 고용·복지(8.87점) > 교육·연구(8.74점) > 산업(8.69점) > 공공안전(8.67점) > 금융(8.64점) > 문화(8.61점) > SOC 분야(8.56점) 순
- 세부 항목별로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9.55점)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품 경험률의 경우 공공안전 분야(8.05점), 향응경험률의 경우 SOC와 문화 분야(각 8.17점) 점수가 가장 낮음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 〉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외부청렴도 항목 점수표 〉

업무유형	전체	SOC	고용·복지	공공안전	교육·연구	금융	문화	산업	에너지
종합청렴도	8.40	8.34	8.49	8.39	8.43	8.38	8.29	8.41	8.54
외부청렴도	8.69	8.56	8.87	8.67	8.74	8.64	8.61	8.69	8.94
부패인식	9.11	8.85	9.24	9.12	9.16	9.14	8.99	9.17	9.4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20	8.98	9.31	9.22	9.26	9.25	9.01	9.27	9.5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9.09	8.85	9.26	9.13	9.12	9.15	8.90	9.14	9.46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9.23	9.05	9.30	9.23	9.26	9.22	9.14	9.29	9.5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9.31	9.09	9.42	9.32	9.37	9.33	9.20	9.37	9.58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82	8.47	8.99	8.84	8.89	8.85	8.74	8.91	9.29
업무처리의 책임성	8.92	8.59	9.13	8.93	8.99	8.97	8.86	8.95	9.31
부패경험	8.56	8.50	8.79	8.42	8.60	8.52	8.54	8.57	8.74
금품 경험률	8.34	8.22	8.57	8.05	8.44	8.37	8.20	8.42	8.58
향응 경험률	8.27	8.17	8.55	8.26	8.31	8.32	8.17	8.19	8.36
편의 경험률	8.47	8.26	8.55	8.51	8.39	8.54	8.74	8.44	8.68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8.43	8.31	8.68	8.27	8.43	8.50	8.52	8.42	8.60
금품·향응 경험규모	8.90	8.97	9.14	8.72	8.98	8.65	8.75	8.93	9.07

붙임 1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56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4개)		금융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통계청
광역자치단체 (1개)		경상남도
기초 자치 단체	시 (6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군 (10개)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구 (10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육청 (2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3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인천항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고직원공제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해운조합

붙임 2

올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156개 기관]

구 분		1개 등급 상승(111개)	2개 등급 상승(37개)	3개 등급 상승 (8개)
중앙행정기관 (13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자치단체 (7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기초 자치 단체 (71개)	시 (25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기도 김포시
	군 (25개)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울진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전라북도 부안군
	구 (21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 분		1개 등급 상승(111개)	2개 등급 상승(37개)	3개 등급 상승 (8개)
	구 (21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청 (5개)		경기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60개)		강원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전남개발공사 전자부품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청렴도 상위 · 우수 시책 기관	한국수력 원자력	▶ 과거 원전 등 계약 관련 부패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발 및 처벌 강화, 사전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항응·편의 제공 자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청렴정책을 병행 실시 ▶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음부즈만 제도 운영,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목민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합동 부패 실태 점검단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자체 적발·개선 조치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2017년 1등급)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그 결과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1등급)가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여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비 사용 관련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공익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청렴 시스템 구축 - 연구비 산정·집행·관리 단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허위 세금계산서 방지를 위한 국세청과의 협업, 연구비 사용의 상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금·포상금 제도 등 운영 ▶ 자체 청렴시책에 맞게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참여형 청렴정책을 실시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멘토로 우수사례를 공유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멘티기관)은 올해 종합 청렴도 3개 등급(5등급→2등급) 향상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는 '13년 3등급에서 2016년 1등급으로 상승하여 '17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13년 5등급에서 '16년 2등급에 오른 이후 3개년 이상 종합청렴도 2등급 유지	2등급	2등급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권익위 청렴 컨설팅 참여 기관 (‘17~ ‘18)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17년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적극적 청렴도 향상 방안 필요 ▶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기획단’(‘18.1.)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컨설팅 추진 ▶ ICT를 활용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자동알림 기능 구현) 등 - 허위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증빙 강화 방안 도입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외부청렴도(▲2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정책고객평가(▲2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한국우편 사업 진흥원	▶ ‘16~‘17년 지속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청렴정책의 전환 필요성 인지 ▶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진단한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고위직 솔선수범’으로 도출됨에 따라 고위직 청렴활동 솔선방안 추진 -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문화지수(정량평가, 설문조사)를 개발·측정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렴 노력 유인 제공 - 청렴 관련 교육 확대, 고위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추진 ▶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부명칭을 ‘행복문화상담실’로 변경하고, 청렴간담회 실시 및 AS(All-Solution)센터 설치 - 대면·정기적 채널인 청렴간담회 개최를 통해 70건의 개선 과제 발굴 - 기존 익명 신고센터인 레드휘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의견 등 15건 접수·대응 ▶ 그 결과 외부청렴도(▲3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권익위 청렴 컨설팅 참여 기관 (2017 ~2018)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7년)에 참여하여 부패취약 분야인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개선 진단을 받고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정책 실시 ▶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 청렴다짐 시스템 구축·운영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지속 상승(5등급→4등급→3등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과 관련된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2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 전년대비 모두 상승	4등급	3등급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	▶ 외부강의 등 신고 알림 시스템 구축, 퇴직자 관련 엄격한 기준 부과를 위한 규정(계약구매업무규칙) 개정, 청렴메시지 및 사례 전파 등 일상 속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청렴정책 실시 ▶ 학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서비스 내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작년 최하 등급이던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하여 2등급이 되었고, 외부청렴도(▲2등급)와 내부청렴도(▲1등급)가 모두 상승하였음	5등급	2등급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민·관 협업 청렴 체계 구축	선박안전 기술공단	▶ '17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높지 않았으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등급으로 청렴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위촉하고, 부패예방교육 실시 후 3개 권역으로 배치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국민안전감독관이 '18년 상반기에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 및 5건의 제안사항 발굴 등 성과 ▶ 그 결과 전년대비 외부청렴도(▲2등급)가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도 1등급 상승하여 3등급 달성	4등급	3등급
	예금보험 공사	▶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과 국민 관점에서의 피드백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음 ▶ 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 추진체계 구축 - 청렴공유 전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렴업무 사례 공유 및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자유로운 토의를 촉진하고, 직원 휴게공간 내 청렴소통함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의견 수렴 - 국민참여단('18.6월~, 50명) 대상 공모를 거쳐 '청렴 국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청렴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국민 참여 활성화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1등급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적용되지 않음	3등급	2등급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선제적 개선 과제 발굴	환경부	▶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 재량권 등 부패·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관리 - 감사관실, 소속 직원, 시민감사관이 총 2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건 정비과제 확정 - 과제 소관부서의 정비과제 추진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등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2차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 ▶ 외부청렴도(▲1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가 상승, 종합청렴도 1개 등급 상승하여 3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보훈 복지의료 공단	▶ '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관행화된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사례를 공모하여 개선과제 도출('17년 9월~12월) - 부서별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감사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17년 7월~)을 강화하여 부패·비위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자체 적발·처벌 강화 - 익명신고 39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부패행위자 15명 처분(파면 등) ▶ 그 결과 '16년 이후 종합청렴도가 지속 상승하여 '18년에 2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외부청렴도(▲2등급)가 크게 상승, 부패사건 감점도 없음	3등급	2등급

붙임 4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1-1. 중앙행정기관(I 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3)	외부청렴도(23)	내부청렴도(23)	정책고객 평가(23)
1등급	통계청(-)	통계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등급) 통계청(-)
2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농촌진흥청(▲1등급) 법무부(▲1등급) 산림청(▼1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농촌진흥청(▲1등급) 문화재청(▲2등급)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1등급)	검찰청(▲1등급) 경찰청(-) 고용노동부(▲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관세청(▲1등급) 통계청(-) 해양수산부(-)	검찰청(-) 관세청(▲2등급) 국가보훈처(▲3등급) 문화재청(▲1등급) 산림청(-)
3등급	검찰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해양경찰청(▲1등급)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1등급) 환경부(▲1등급)	고용노동부(▲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관세청(-)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1등급) 산림청(▼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1등급) 행정안전부(-) 환경부(▲1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농촌진흥청(-) 법무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2등급)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1등급)
4등급	경찰청(▼1등급) 국방부(▼1등급)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1등급)	경찰청(▼1등급)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경찰청(▼1등급) 고용노동부(▼1등급) 국세청(▼2등급) 농촌진흥청(▼2등급) 문화체육관광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외교부(-)
5등급	국세청(▼1등급)	검찰청(▼1등급)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1등급)	국방부(-)

※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환경부는 17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1-2. 중앙행정기관(표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1)	외부청렴도(21)	내부청렴도(21)	정책고객 평가(21)
1 등급	법제처(▲1등급) 새만금개발청(신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새만금개발청(신규기관)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특허청(-)
2 등급	금융위원회(-)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기관)	금융위원회(▼1등급) 기상청(-) 법제처(▲1등급) 소방청(▼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기관) 통일부(▼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방위사업청(▲1등급) 병무청(-) 새만금개발청(신규기관)	국무조정실(▲1등급) 법제처(▼1등급) 병무청(-) 새만금개발청(신규기관) 인사혁신처(-)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등급)
3 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1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인사혁신처(▼2등급) 조달청(-) 통일부(▼1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1등급)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기관) 인사혁신처(▼1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기관)
4 등급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1등급) 여성가족부(▼1등급) 특허청(▼2등급)	교육부(▼1등급)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1등급) 병무청(▼1등급)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기상청(▲1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중소벤처기업부(▼2등급)	금융위원회(▼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여성가족부(▼2등급)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통일부(▼1등급)
5 등급	중소벤처기업부(▼2등급)	특허청(▼2등급)	여성가족부(-) 통일부(▼2등급)	교육부(▼1등급) 방위사업청(▼2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광역자치단체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1 년 간	부산광역시(▲2등급)	부산광역시(▲2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충청남도(▲1등급)
2 년 간	경기도(▲1등급) 경상남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울산광역시(-) 충청북도(▲2등급)	경기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울산광역시(-) 충청북도(▲3등급)	강원도(-) 경기도(▲2등급)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기도(▼1등급) 경상남도(▼1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전광역시(▲2등급) 충청북도(▲1등급)
3 년 간	강원도(-) 경상북도(▲2등급)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1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강원도(-) 경상남도(▼1등급) 경상북도(▲2등급)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1등급) 충청북도(▼1등급)	강원도(-) 경상북도(▲1등급) 대구광역시(▲1등급)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1등급) 전라북도(-)
4 년 간	서울특별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남도(-) 전라북도(▼1등급) 충청남도(▼3등급)	서울특별시(-) 전라남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울산광역시(▼2등급)	-
5 년 간	-	전라북도(▼2등급) 충청남도(▼3등급)	경상북도(▼1등급)	울산광역시(▼3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1. 기초자치단체(시)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75)	외부청렴도(75)	내부청렴도(75)
1 등급	경상남도 사천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1등급)	-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2 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3등급) 경기도 부천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1등급)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파주시(▲2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2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공주시(▲2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3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1등급) 경기도 의왕시(▼1등급)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경상남도 사천시(▲2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1등급)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2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구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2등급)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남도 여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2등급)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제천시(▲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3 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1등급)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2등급)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경기도 이천시(▲1등급)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경산시(▼2등급) 경상북도 김천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2등급)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1등급)	강원도 동해시(▼1등급) 강원도 삼척시(▼1등급) 경기도 과천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동두천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1등급)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1등급) 경상북도 김천시(▲1등급)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속초시(▼1등급)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2등급)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안동시(▼1등급)

4 등급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계룡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충청북도 제천시(▲2등급)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1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1등급) 충청북도 제천시(▲2등급)	경상북도 영천시(▼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1등급)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청주시(▲2등급)
	강원도 속초시(▼2등급)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기도 안양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2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강원도 속초시(▼2등급) 강원도 태백시(▼1등급)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1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양주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평택시(▼2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영주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1등급)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3등급) 경기도 양주시(▼2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2등급)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3등급) 경기도 양주시(▼3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2등급)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2등급)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전라남도 나주시(▼2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2. 기초자치단체(군)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82)	외부청렴도(82)	내부청렴도(82)
1 등급	충청남도 예산군(▲1등급) 충청북도 음성군(▲2등급)	충청남도 예산군(▲1등급)	경상남도 산청군(▲1등급)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1등급)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영광군(▲1등급) 전라북도 고창군(-)
2 등급	강원도 정선군(▲1등급)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1등급)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창녕군(▼1등급) 경상남도 함안군(▲1등급) 경상북도 군위군(▲1등급)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청도군(▲1등급) 경상북도 칠곡군(▲1등급)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1등급)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용진군(▲1등급)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해남군(▲1등급) 전라북도 부안군(▲3등급) 전라북도 순창군(▲1등급) 전라북도 임실군(▲1등급) 전라북도 장수군(▲1등급) 충청남도 서천군(▲2등급)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1등급) 충청북도 보은군(▼1등급)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1등급) 충청북도 증평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정선군(▲1등급) 강원도 철원군(▲1등급) 강원도 화천군(▲1등급)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창녕군(▼1등급) 경상북도 고령군(▲1등급) 경상북도 군위군(▲1등급) 경상북도 청도군(▲1등급) 경상북도 칠곡군(▲2등급)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1등급) 인천광역시 용진군(▲1등급)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해남군(▲1등급) 전라북도 부안군(▲3등급) 전라북도 순창군(▲1등급) 전라북도 임실군(▲2등급)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서천군(▲2등급)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태안군(▲1등급) 충청북도 보은군(▼1등급)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1등급)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강원도 인제군(▲1등급)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거창군(▼1등급) 경상남도 남해군(▲1등급)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성주군(▲1등급) 경상북도 예천군(▲1등급) 경상북도 울진군(▲2등급) 경상북도 의성군(▲1등급) 경상북도 칠곡군(▲1등급) 전라남도 담양군(▲1등급)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해남군(▲1등급) 전라북도 부안군(▲1등급)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1등급) 충청북도 단양군(▲1등급)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2등급) 충청북도 증평군(▼1등급)
3 등급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1등급) 강원도 인제군(▼1등급) 강원도 철원군(▼1등급) 강원도 평창군(▲2등급) 강원도 홍천군(▲1등급) 강원도 화천군(▲1등급) 경상남도 하동군(▼1등급)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양군(▼1등급) 경상북도 울진군(▲2등급)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1등급) 전라남도 곡성군(▲1등급)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1등급) 강원도 평창군(▲2등급) 강원도 홍천군(▲2등급) 경상남도 거창군(▲1등급)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영양군(▼1등급) 경상북도 예천군(▼1등급) 경상북도 울진군(▲2등급)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1등급)	강원도 양구군(▼1등급)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1등급) 경상남도 고성군(▼2등급)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인천광역시 강화군(▼1등급) 전라남도 강진군(▲1등급)

4 등급	전라남도 담양군(▼1등급)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진도군(▲1등급) 전라남도 함평군(▼1등급)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1등급) 전라북도 무주군(▼1등급) 전라북도 완주군(▲1등급)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1등급)	부산광역시 기장군(▼1등급)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담양군(▼2등급) 전라남도 영광군(▼1등급) 전라남도 장성군(▼1등급) 전라남도 진도군(▲1등급) 전라남도 함평군(▼1등급)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무주군(▼1등급) 충청남도 홍성군(▲1등급)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1등급)	전라남도 구례군(▲1등급) 전라남도 보성군(▲1등급) 전라남도 신안군(▼1등급)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화순군(▲1등급)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1등급)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1등급) 충청북도 괴산군(▲1등급) 충청북도 보은군(▼1등급)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진천군(▼1등급)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고성군(▼2등급) 경상남도 남해군(▼2등급) 경상남도 의령군(▼1등급) 경상남도 합천군(▼1등급)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부산광역시 기장군(▼1등급) 전라남도 구례군(▼1등급) 전라남도 무안군(▼1등급)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2등급) 전라남도 영암군(▼1등급) 전라북도 진안군(▼2등급)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1등급) 충청북도 진천군(▼2등급)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고성군(▼1등급) 경상남도 남해군(▼2등급)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1등급) 경상북도 성주군(▲1등급)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2등급) 전라남도 영암군(▼1등급)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북도 고창군(▼2등급) 전라북도 완주군(▲1등급) 전라북도 진안군(▼2등급)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진천군(▼2등급)	강원도 영월군(▲1등급) 강원도 철원군(▼1등급) 강원도 횡성군(▲1등급) 경기도 가평군(▼1등급) 경상남도 합천군(▼3등급)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대구광역시 달성군(▼1등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곡성군(▲1등급) 전라남도 완도군(▼1등급)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서천군(▼1등급) 충청남도 홍성군(▼1등급)
	강원도 고성군(▼2등급)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함양군(▼1등급) 경상북도 봉화군(▼1등급)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완도군(▼1등급) 전라남도 장흥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1등급)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2등급) 전라남도 무안군(▼1등급) 전라남도 장흥군(▼1등급)	강원도 고성군(▼2등급) 강원도 화천군(▼1등급) 부산광역시 기장군(▼1등급) 전라남도 고흥군(▼1등급) 전라남도 장성군(▼1등급)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2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3. 기초자치단체(구)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69)	외부청렴도(69)	내부청렴도(69)
1 비교 단위	-	-	부산광역시 동래구(▲1등급)
2 비교 단위	광주광역시 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1등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1등급) 부산광역시 남구(▲3등급) 부산광역시 동구(▲1등급) 부산광역시 동래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2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3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2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1등급)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1등급) 대전광역시 서구(▲1등급) 대전광역시 유성구(▲2등급) 부산광역시 동래구(▲2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2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3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2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1등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동구(▲1등급)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구광역시 남구(▲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1등급) 대전광역시 대덕구(▼1등급)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동구(▲1등급)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1등급)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1등급) 인천광역시 부평구(-)
3 비교 단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중구(▲1등급) 대전광역시 중구(▼1등급)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북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상구(▲2등급) 부산광역시 수영구(▼1등급)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광주광역시 남구(▼1등급) 광주광역시 동구(▲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1등급)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1등급)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1등급) 부산광역시 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중구(▼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1등급) 대전광역시 동구(▼1등급)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1등급)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금천구(▼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초구(▼1등급)

4 대 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등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서울특별시 중구(▲1등급) 서울특별시 중랑구(▼1등급)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1등급)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1등급) 인천광역시 중구(▲2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등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서울특별시 중구(▲2등급) 울산광역시 북구(▼1등급)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1등급) 울산광역시 북구(▼1등급)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관악구(▼2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인천광역시 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중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등급) 부산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영도구(▼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2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등급) 울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사상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천광역시 서구(▼1등급) 인천광역시 중구(▲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강서구(▼2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3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2등급)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강서구(▼2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3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2등급) 광주광역시 남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 동구(-)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4. 교육청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1 년 간 평 가	-	-	-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1등급)
2 년 간 평 가	강원도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강원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강원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3 년 간 평 가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1등급)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2등급)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1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4 년 간 평 가	-	대전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등급)
5 년 간 평 가	광주광역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1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1. 공직유관단체(I 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1)	외부청렴도(21)	내부청렴도(21)	정책고객 평가(21)
1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
2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3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1등급)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2등급)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1등급)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마사회(▲2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3 등급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전KPS(▼1등급)	강원랜드(▲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2등급) 국민연금공단(▼1등급)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1등급) 한국가스공사(▲2등급) 한국산업은행(▼2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전KPS(▼1등급)	근로복지공단(▼1등급) 중소기업은행(▲1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1등급)
4 등급	한국마사회(▲1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1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2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산업은행(▼1등급)
5 등급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2등급)	중소기업은행(▼2등급)	강원랜드(-) 한국마사회(▼2등급)	강원랜드(-)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공사(▼3등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7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2. 공직유관단체(표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37)	외부청렴도(37)	내부청렴도(37)	정책고객 평가(37)
1 배 점	-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1등급)	한국남부발전(▲1등급)
2 배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기술보증기금(▲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1등급) 한전KDN(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1등급) 대한석탄공사(▼1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수협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1등급)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석유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중부발전(주)(-) 한전원자력연료(주)(-)	그랜드코리아레저(▲3등급) 기술보증기금(▼1등급)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2등급)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1등급) 한국은행(▲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2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2등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1등급) 한전KDN(주)(▲1등급)
3 배 점	국립공원관리공단(▼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등급)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1등급) 한전원자력연료(주)(▼1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은행(▼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2등급) 한전KDN(주)(▼2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1등급) 한전KDN(주)(-)	국립공원관리공단(▼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등급) 도로교통공단(-) 수협중앙회(▲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동서발전(주)(▼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은행(▼1등급) 한국중부발전(주)(▼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한국환경공단(▲1등급)
4 등 급	금융감독원(▲1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2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주)(▼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금융감독원(▲1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주)(▼2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1등급) 대한석탄공사(▼1등급) 수협중앙회(▼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주)(▼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한국환경공단(▼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1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기술공사(▼1등급) 한국서부발전(주)(▼1등급) 한국수출입은행(▼4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2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2등급)
5 배 점	한국가스기술공사(▼3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한국환경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3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한국환경공단(▼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등급) 한전원자력연료(주)(▼2등급)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2등급)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7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3. 공직유관단체(파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37)	외부청렴도(37)	내부청렴도(37)
1 등급	한국감정원(▲1등급)	-	한국감정원(▲1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1등급)
2 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3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1등급)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감정원(▲1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3등급)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1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3등급)
3 등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립생태원(신규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1등급) 한국거래소(-) 한국국제협력단(▲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1등급) 한국에너지공단(▲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립생태원(신규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2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거래소(-) 한국국제협력단(▲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생태원(신규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사회보장정보원(▲2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해양환경공단(▲1등급)
4 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2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거래소(▼2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1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해양환경공단(▼1등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협력단(▲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시설안전공단(▼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1등급)
5 등급	산림조합중앙회(▼2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산림조합중앙회(▼2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3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1등급)

※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4. 공직유관단체(IV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45)	외부청렴도(45)	내부청렴도(45)
1 대 단	군인공제회(▲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	서울신용보증재단(▲1등급)
2 대 단	국제방송교류재단(▲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중앙회(▲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2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3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신규기관)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운조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신규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1등급) 군인공제회(▲1등급) 노사발전재단(신규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규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천항만공사(▲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설관리공사(신규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신규기관)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운조합(-)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군인공제회(▼1등급) 부산항만공사(-) 신용회복위원회(신규기관) 중소기업중앙회(▲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등급) 한국연구재단(-) 한국재정정보원(신규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신규기관) 한국해운조합(▲1등급)
3 대 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찰공제회(▼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신규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1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규기관) 신용회복위원회(신규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신규기관)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신규기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등급) 한국연구재단(▲2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신규기관) 한국표준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찰공제회(▼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1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2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신규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규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2등급) 한국장애인개발원(신규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환경보건협회(신규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신규기관) 한국고용정보원(▲2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신규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표준협회(▲1등급)
4 대 단	노사발전재단(신규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등급)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신규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등급) 한국장애인개발원(신규기관) 환경보건협회(신규기관)	신용회복위원회(신규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등급) 한국고용정보원(▼2등급)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1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신규기관) 한국표준협회(▼1등급)	경찰공제회(▼1등급) 노사발전재단(신규기관) 대한체육회(▼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학재단(▲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환경보건협회(신규기관)
5 대 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등급) 한국장학재단(▼1등급)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3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신규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규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신규기관)

※ 대한체육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7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5. 공직유관단체(V유형)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2)	외부청렴도(22)	내부청렴도(22)
1 년 단	-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여수광양항만공사(▲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신규기관)
2 년 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등급) 정부법무공단(신규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신규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1등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부법무공단(신규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년 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신규기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1등급) 영화진흥위원회(▲1등급) 울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1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2등급) 한국벤처투자주(신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규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신규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1등급) 울산항만공사(▼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신규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신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규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신규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1등급) 울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벤처투자주(신규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년 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신규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2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신규기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1등급) 정부법무공단(신규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1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규기관)
5 년 단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신규기관)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6. 공직유관단체(연구원)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24)	외부청렴도(24)	내부청렴도(24)
1 년 단 기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1등급)
2 년 단 기	국방과학연구소(▲3등급) 전자부품연구원(▲1등급)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2등급)	기초과학연구원(▲1등급) 전자부품연구원(▲1등급) 한국기계연구원(▲1등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한국전기연구원(▲1등급)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등급)
3 년 단 기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1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2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1등급) 한국화학연구원(▲2등급)	국방과학연구소(▲2등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1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1등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2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1등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등급)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2등급)
4 년 단 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2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1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등급)
5 년 단 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등급) 한국식품연구원(▼2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3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1등급)	한국식품연구원(▼2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기초과학연구원(▼1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7. 공직유관단체(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47)	외부청렴도(47)	내부청렴도(47)
1 비 판	-	-	전북개발공사(-)
2 비 판	경남테크노파크(신규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신규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1등급) 여주도시관리공단(신규기관) 울산도시공사(▲2등급) 인천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1등급) 전북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신규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신규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2등급)	경기도문화의전당(신규기관) 경남테크노파크(신규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신규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1등급) 안양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신규기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신규기관) 울산시설공단(▲1등급) 인천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1등급) 제주테크노파크(신규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신규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2등급) 파주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2등급) 대전도시공사(▲1등급)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1등급) 안양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울산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창원시설공단(신규기관) 충북테크노파크(신규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1등급)
3 비 판	강원도개발공사(▲1등급) 경기도문화의전당(신규기관)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등급) 남양주시공사(신규기관)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2등급) 부산시설공단(▲2등급) 부산지방공단스포원(▼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2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신규기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용인문화재단(신규기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신규기관) 울산시설공단(▼1등급)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1등급) 창원시설공단(신규기관) 충북개발공사(▲1등급) 파주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화성도시공사(신규기관)	강원도개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등급) 남양주시공사(신규기관) 대구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1등급) 부산지방공단스포원(▼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용인문화재단(신규기관) 울산도시공사(▲1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신규기관) 화성시문화재단(신규기관)	강원도개발공사(▲1등급) 경기도공사(▼1등급) 경남테크노파크(신규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광주도시관리공사(신규기관) 대구도시공사(▼1등급)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등급)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신규기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신규기관) 용인문화재단(신규기관) 인천교통공사(▲2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인천시설공단(-) 제주테크노파크(신규기관) 충북개발공사(▲2등급) 화성도시공사(신규기관)

4 년 간	대전도시공사(▼1등급) 부산도시공사(▼1등급) 화성시문화재단(신규기관)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1등급)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신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1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신규기관) 창원시설공단(신규기관)	경남개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남양주도시공사(신규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1등급)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신규기관) 울산시시설공단(▼1등급) 파주시시설관리공단(신규기관)
5 년 간	경기도시공사(▼2등급)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1등급) 서울디자인재단(신규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2등급)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2등급) 대전도시공사(▼2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2등급)	경기도문화의전당(신규기관) 서울디자인재단(신규기관) 화성시문화재단(신규기관)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